마을·주민 연대로 전남 '작은 학교' 살린다

도교육청 중장기 계획 시행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특성 맞는 학교 모델 발굴 연구·정책수립 지원단도 구성

전체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'작 은학교'를 살리기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새 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.

'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작은 학교'를 목표로 내세운 이번 프로젝트가 농어촌 인구·출산율 감소라는 이중고를 맞 아 존폐 기로에 선 전남 작은학교에 활기 를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.

전남도교육청은 3개월에 걸친 연구•준

비작업을 마치고 '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 계획'을 수립,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 어간다고 8일 밝혔다.

이 계획서에는 추진배경과 목적, 현황, 분석, 추진 방향과 과제 등이 담겼지만 전 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'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', '학교는 사회적 자본, 마을과의 강력한 연대로 해법을 찾는다', '작은학교만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교 육과정 등을 개발해 모델을 만든 후 육성・ 확산시킨다'로 요약된다.

전남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이전에도 진행됐지만, 이번에 내놓은 중장 기계획은 이전보다 한층 절박감이 엿보인 다. 당장 투입된 예산만 보더라도 지난 2017년 15억원, 2018년 23억원이던 것이

올해에는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1% 증액

예산은 크게 작은학교 교육력제고나 교 육환경 개선, 학교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 체 사업 지원, 전남형미래학교 개발·추진 등 3가지 부문에 쓰인다. 전남교육청은 우 선 향후 3년 안에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작 은학교 모델 발굴에 힘을 쏟기로 했다. 3년 간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해남교육지 원청 주관하에 전남에서 적용가능한 작은 학교 모델을 만들고, 학교 단위에서도 적 합한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.

교육청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연구. 정책수립·지원 등을 위한 지원단도 구성하 고 운영에 들어간다. 학교는 사회적자본, 공동체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시설 구축, 교 육 협동조합 운영, 전남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. 구체적으로 주민 과 학교가 공동으로 돌봄교실를 운영하거 나 지역민 강사를 육성하고 공동으로 매점 을 운영하는 식으로 주민 참여를 늘려 결 국에는 배움의 터를 학교에서 마을 전체로 넓혀간다는 구상이다.

전남에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'작은 학 교'가 지난해 10월 기준, 전체학교 887개 초·중·고교(분교 포함) 가운데 374곳 (42.2%)에 달한다.

전남 초·중·고교학생 수는 2000년 34만 1000여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9만9000 여명으로 급감했다.

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

"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의무화 해 달라" 고교 1학년생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

광주 운남고 이수영 양

학생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시켜달 라는 고교생의 목소리가 나왔다.

학생이 학교의 주인이자 존립 근거이면 서도 정책 결정에서는 배제된 지금의 상황 을 지적하며,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

광주 운남고 1학년 이수영 양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 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·중등교육법 개정을 청원했다. 8일 오후 현재 22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.

이양은 국민신문고, 국가인권위원회에 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. 이양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게 돼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목소리를 냈지만,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

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학교에 관한 '근원 적인 문제'를 품게 됐다. 학교의 주요 정책 을 결정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작 학생 은 참여가 배제됐다는 사실이다.

초·중등교육법 31조에서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

이양은 해당 조항에 학생 대표를 추가해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 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. 이양은 청원 글 에서 "지자체와 단위 학교마다 학생의 의견 을 반영하도록 규정했지만, 명시된 내용이 불분명해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이 매우 제한적"이라며 "이는 교육의 세 주체인 학 생, 교사,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민주적인 운영 원리에 어긋난다"고 말 했다. /김형호기자 khh@kwangju.co.kr

목포 화재 피해 상가 생계·철거비 등 지원

전남도 경영안정자금 융자도

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7일 화 재 피해를 입은 목포시 산정동 먹자골목 상가 상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

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목포시 산정동 먹자골 목 상인들이 신속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과 철거비, 경영안정자 금 융자, 임시 판매시설 설치 운영 등을 지 원할 계획이다.

생계지원금은 영업활동이 중단돼 생활 이 어려워진 상인들을 위해 피해 세대당

생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. 또 한, 신속한 영업재개를 위해 화재 잔존물 처리비용도 목포시와 전남도가 50%씩 지 원하기로 했다.

특히 설 명절 대목을 앞둔 만큼 화재현 장 인근 신 중앙시장 주차장에 임시 판매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

아울러 영업 재개에 필요한 경영안정자 금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 1.2% 의 이자로 3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지 원할 예정이다.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

국립공원관리공단, 30년 만에 명칭 변경

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'국립공원공단'으로 변경된다.

이는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 서 소극적・규제적 의미을 가진 '관리' 용 어를 삭제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 업무 수행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.

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'국 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'일부 개정안 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1987년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, 공원시설의 설 치·유지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. 무등산・ 지리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 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, 29개의 국립공



원사무소를 두고 있다.

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단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'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 원사업'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·관리 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 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.

/김용희 기자 kimyh@kwangju.co.kr

영산강환경청, 환경지킴이 37명 22일까지 모집

영산강유역환경청이영산강・섬진강의 수질보전 감시활동을 위해 2019년 환경 지킴이 37명을 채용한다.

모집 기간은 9일부터 22일까지로, 영 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(me.go.kr/ ysg) 또는 정부지원일자리 홈페이지 워 크넷(work.go.kr)에 공고할 계획이다.

선발된 환경지킴이는 주 5일(하루 8시 간) 근무로 영산강·섬진강유역의 환경오 염행위 감시·계도, 하천변 정화활동, 지역 주민 교육·홍보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 을 수행하게 된다. 급여는 1일 6만6800원 (식비 등 1만3000원 별도 지급)이다.

/김용희 기자 kimyh@kwangju.co.kr



빨간불 켜진 사랑의 온도탑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5·18민주광장의 '사랑의 온 도탑'이 70도에도 못미쳐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

켜졌다.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20일 모금을 시작한 희망 2019캠페인은 오 는 31일까지 53억49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

광주사업지

- •동 구 | 지산동, 소태동
- •서 구 | 금호동, 풍암동, 치평동, 농성동
- •남 구 | 주월동
- 북 구 | 신용동, 연제동, 운암동
- 광산구 | 수완동, 신창동, 운남동, 월계동 산월동, 소촌동, 송정동, 도산동

전국사업지

- 서울특별시 | 잠실동
- 부산광역시 | 광안동
- 전남 화순군 • 제주특별자치도 | 노형동 • 전남 담양군

땗 (062)382-8879

• 전남 목포시

• 경기도 안성시 | 중리동 • 전북 완주군

가족회사 (주)송도건설 / (주)금호에너지 / (주)송도 / (유)송산